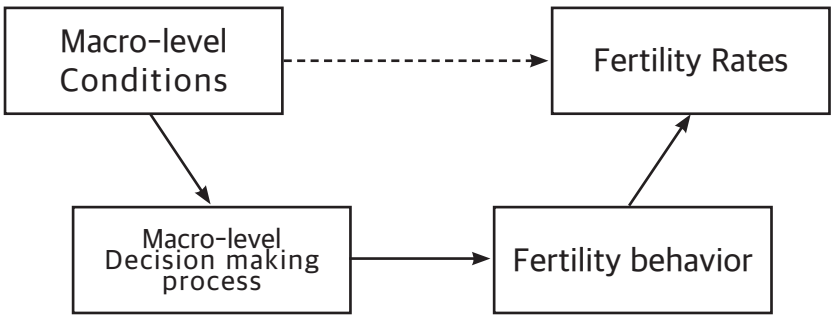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

이 소 영

1. 배 경

가치관이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의미한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의 행위를 계획하므로 가치관은 혼인과 출산, 자녀 양육과 이주(이동)와 같은 인구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한국인구학회, 2016, p.39). 개인의 출산 행동을 설명하는 가치관은 다음의 두 이론에서 발전되어왔다. 우선, 미시·거시 관점에서의 재생산 의사 결정 모형(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project model)은 출산율(fertility rates)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거시적인 요인과 미시적인 요인을 도식화하고 있다. 출산율은 간접적으로는 거시적인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미시적인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거시적 차원의 국가 경제 상황은 개인의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출산 행위에 이르게 된다. 이 모형에서는 미시 수준의 의사 결정 과정과 출산 행위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 계획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한 행위 이론에 따라 출산의 의도(intentions)는 의사 결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는 태도(attitudes),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인지한 행위의 통제(perceived behavioural control)에 의해 결정된다.



출처: Philipov 외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이소영 외 (2019,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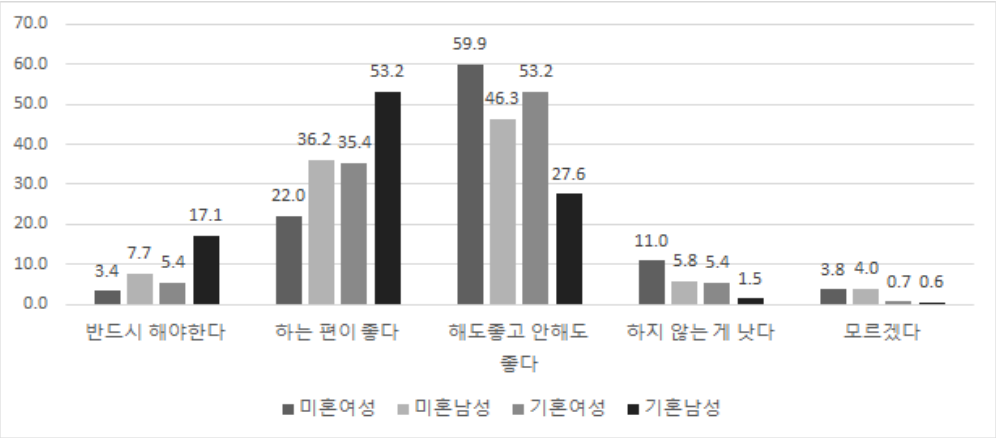
〈그림 11〉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Project Model

또한, 가치관의 변화는 제1차 인구변천이론(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출산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을 통해 출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제1차 인구변천이론은 근대화, 산업화 이전의 고출생과 고사망의 균형에서 비약적인 인구 자연 증가 이후 저출생, 저사망이라는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행을 논의한다. 다시 말해 출산율의 변동이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재생산되는 대체출산율에서 멈추어 장래에는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구 자연 증감 수준은 항상성(homeostasis)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인 출산율의 하락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인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2차 인구변천이 등장하게 된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사고의 전환(ideational changes)으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가설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가치관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저출산이 지속화되고 고착화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가치관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을 주기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통계를 생산한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한 종단적이며 횡단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49세 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혼인 상태와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기혼남성에게서 가장 높았고(17.1%), 다음으로 미혼남성(7.7%), 기혼여성(5.4%), 미혼여성(3.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여성이 11%로 네 집단 중 가장 높게 나

(단위:%)



주: p= .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원자료.

〈그림 12〉 19~49세 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21

타났고 기혼남성의 경우는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해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강한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0년 19.2%에서 2021년 5.3%로 급감하였다. 긍정(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의 응답 비율은 2000년 약 39.7%에서 2021년 40.7%로 9%p 하락하였다. 또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유보적 견해는 2000년 44.2%에서 2021년 53.1%로 증가하였다. 반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부정의 견해는 지난 21년 동안 유사한 수준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3〉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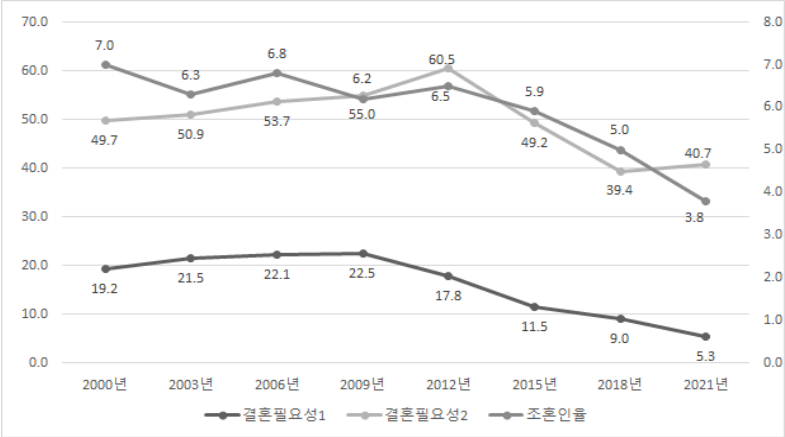
(단위: %)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
2000년	19.2	30.5	44.2	5.4	0.8	100
2003년	21.5	29.4	40.8	7.8	0.6	100
2006년	22.1	31.6	42.4	3.9	0.0	100
2009년	22.5	32.5	40.2	4.7	0.0	100
2012년	17.8	42.7	34.8	4.5	0.3	100
2015년	11.5	37.7	44.4	6.0	0.4	100
2018년	9.0	30.4	53.3	6.8	0.3	100
2021년	5.3	35.4	53.1	5.5	0.7	100

주: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강한 동의(반드시 해야 한다) 및 동의(반드시 해야한다+하는 편이 좋다)의 비율과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주1.: 필요성 1은 ‘반드시 해야한다’ 응답 비율, 필요성 2는 ‘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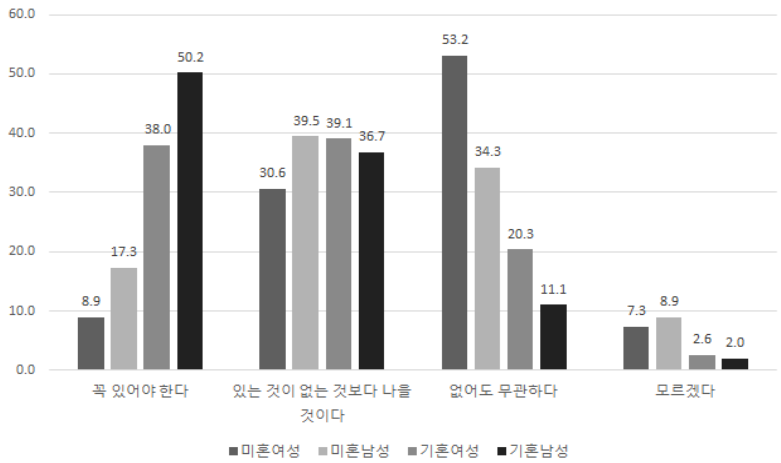
주2: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원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그림 13〉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과 조혼인율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출산은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결혼관의 변화는 자녀관의 변화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나타난 19~49세 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혼인 상태와 성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며 혼인 상태와 성별로 구분한 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기혼남성(50.2%)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혼여성(38.0%), 미혼남성(17.3%), 미혼여성(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하는 부정의 응답 비율은 미혼여성에게서 가장 높게(53.2%) 나타나고, 다음으로 미혼남성(34.3%), 기혼여성(20.3%), 기혼남성(11.1%)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주.: p= .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원자료.

〈그림 14〉 19~49세 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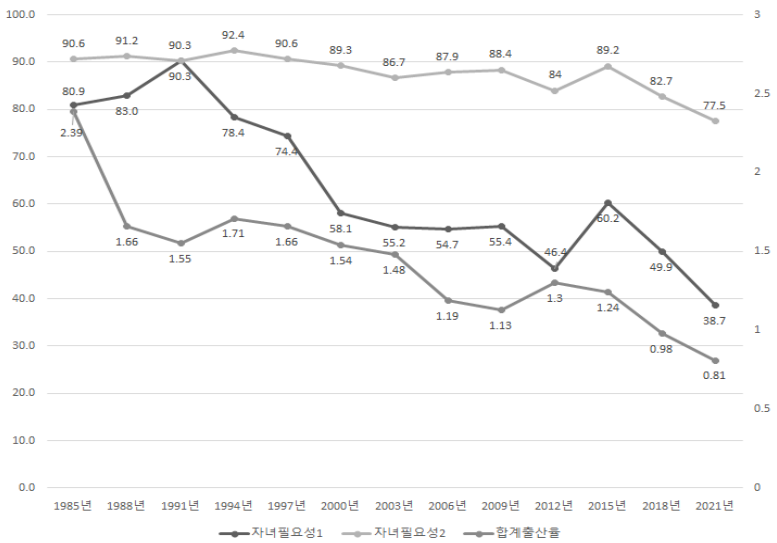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해보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강한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은 1985년 80.9%에서 2021년 38.0%로 42.9%p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부정의 응답은 1985년 8.9%에서 20.3%로 크게 증가하였다. 긍정(꼭 있어야 한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의 응답 비율은 1985년 90.6%에서 2021년 77.1%로 13.5%p 하락하였다.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강한 동의(꼭 있어야 한다) 및 동의(꼭 있어야 한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의 비율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2015년부터 강한 동의 및 동의의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85~2021 (단위: %)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계
1985년	80.9	9.7	8.9	0.5	100.0
1988년	83.0	8.2	8.7	0.2	100.0
1991년	90.3	N/A	8.5	1.2	100.0
1994년	78.4	14.0	7.5	0.2	100.0
1997년	74.4	16.2	9.1	0.3	100.0
2000년	58.1	31.2	10.2	0.6	100.0
2003년	55.2	31.5	12.7	0.5	100.0
2006년	54.7	33.2	12.1	N/A	100.0
2009년	55.4	33.0	11.6	N/A	100.0
2012년	46.4	37.6	15.7	0.3	100.0
2015년	60.2	29.0	10.6	0.1	100.0
2018년	49.9	32.8	16.9	0.4	100.0
2021년	38.0	39.1	20.3	2.6	100.0

주: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주1: 필요성 1은 '꼭 있어야 한다' 응답 비율; 필요성 2는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응답 비율의 합. 주2: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그림 15〉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

3. 가치관과 인구정책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 국가의 중장기계획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이 후 5년마다 수립되어 현재까지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글에서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서 드러난 가치관의 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 그리고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발전 가능 사회라는 비전과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결혼 및 출산 연령층(25~34세)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의 경제적 요인,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와 같은 가치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치관을 저출산의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치관 요인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지로 전략적인 교육과 홍보 실시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저출산.고령화 실태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인식을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민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교육과 홍보가 추진되었다.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은 저출산 ·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과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으로 인구정책의 특성은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와 연관되었다고 규정하며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책 추진 방향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일 · 가

정 양립 강화, 가치관 변화 대응 등이 적절히 어우러진 정책 조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사회적 운동과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저출산이 초래할 심각성을 강조하는 국가적 · 애국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적 · 감성적 방향의 긍정적 가치관을 조성하고, 가족 및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생명 존중 의식 제고, 양성평등 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의 인식과 환경 변화에 주력하였다.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과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및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 ·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인식을 전환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결혼 · 출산 ·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확대라는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세부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홍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초 · 중 · 고 사회 · 지리, 통합사회, 도덕, 가정(실과) 교육 과정에 건전한 가족관, 결혼 · 출산 · 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인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군 교육과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인구교육 · 직장교육을 통해 인식 ·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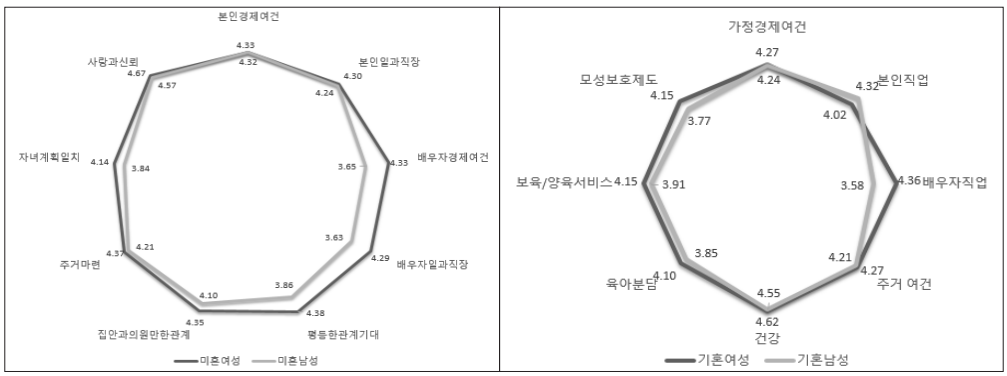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과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 등의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전통적이며 경직적인 가족 규범과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과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는 청년층 가치관의 변화 등을 문화 가치관 측면의 원인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기반 강화 영역의 정책 방향의 하나로 가치관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 가치관 및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족관계, 부모 · 자식 관계와 소통 방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가족문화를 모색하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등 인식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를 세

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4. 시사점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19~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안정된 주거 마련(4.24점), 본인의 경제적 여건(4.18점), 본인의 일과 직장(4.17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혼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본인의 경제적 여건(4.33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본인의 일과 직장(4.24점), 안정된 주거 마련(4.21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미혼여성에게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 외에도 미혼여성의 경우는 공평한 가사 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4.38점),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4.33점), 배우자의 일과 직장(4.29점)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9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남성의 경우 자녀 출산 결정에 있어서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4.55점), 본인의 안정된 직업(4.32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24점), 주거 여건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그림 16〉 결혼 및 자녀 출산의 주요 요인

(4.21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 결정에 있어서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4.72점),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4.36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27점), 주거 여건(4.27점),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가능성(4.15점),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4.15점), 배우자의 육아 분담(4.10점), 본인의 안정된 직업(4.0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결혼을 선택하고 자녀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 건강 요인, 고용과 주거 등의 경제적인 여건, 보육 및 양육 서비스의 이용성과 같은 인프라 요인, 본인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 가능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더이상 효과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결혼과 자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의 결혼과 자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이라는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소: 세종시 시청대로 370
전화: 044-287-8110
메일: sylanne@kihasa.re.kr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박종서 · 임지영 · 김은정 · 변수정 · 이소영 · 장인수 · 조성호 · 최선영 · 이혜정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 장인수 · 이삼식 · 이철희 · 신손문 · 신성호 · 박현경 · 손인숙 · 손호성 · 오수영 · 최용성(2019):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구학회(2016): 인구대사전』, 통계청.

Philipov, D., Liefbroer, A. C., Klobas, J. E.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Springer.

〈彙　報〉

1.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총 17회의 ‘CDJ 대학원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7月 6日～ 11月 18日)
2.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는 ‘KBER Summer Institute: Macroeconomics II’ 를 주제로 하계 연구회를 개최하였다.(8月 11日)
3.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는 ‘계량경제 방법론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8月 12日～13日)
4.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는 ‘KBER Summer Institute: Econometrics’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8月 12日～13日)
5.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2022년도 분배정의연구센터 하계 워크숍(CDJ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8月 16日～8月 18日)
6.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경제: 이인호 교수 정년기념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8月 29日)
7.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는 ‘2022년 한국계량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0月 14日)
8.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는 2022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경제 세션을 지원하였다. (10月 14日)
9. 이 근 교수가 제41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0月 18日)
10. 윤참나 교수가 제11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0月 18日)
11.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거래’를 주제로 2022년도 한국응용경제학회 정책 심포지엄 정책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10月 25日)
12.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시장과 윤리’를 주제로 2022년도 정치경제철학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10月 28日～11月 4日)
13. 안동현 교수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0月 31日)
14. 전영섭 교수가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을 수상하였다. (11月 2日)

15.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경제와 정의’를 주제로 2022년도 정치경제철학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11月 11日~11月 25日)
16.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는 2022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11月 16日)
17.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는 ‘경제학 속 경제사-장기적 관점 또는 역사적 경험’을 주제로 개최된 2022 경제사학회 한국경제 발전 세션을 지원하였다. (12月 2日)
18. 류근관 교수가 김준보 메달을 수상하였다. (12月 5日)
19.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Positive Theory of Behavior, Institution and Social Welfare’를 주제로 CDJ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2月 23日)
20.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동반성장과 ESG’를 주제로 CDJ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2月 29日)
21. 본 연구소는 2022년 2학기 주례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가졌다.

· 장용성 교수(서울대학교):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9月 16日)
· Dmitry Shapiro 교수(서울대학교): Quality Communication via Cheap-Talk Messaging in Experimental Auctions (9月 21日)
· 이치훈 박사(국제금융센터): 미국의 대중국 연합 전략 향방과 한중의 경제 역학 구조 진단 (9月 28日)
· 구윤철 특임교수(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경제학도들의 역할 (10月 19日)
· 홍기현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의 방법론적 특성:유용성과 한계 (11月 23日)
· 황윤재 교수(서울대학교): 기대인플레이션의 측정과 정책적 함의 (12月 14日)